

## 건설업계 “종합심사낙찰제 개선해야”

중견·중소 건설업계가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 실적 및 배치 기술사 등이 부족한 중견·중소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에 대한 건설업체 건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공 실적,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공동도급 등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시공 실적을 연도별 차등평가가 아닌 균등평가로 실시하고 공동도급사 실적에 지분을 적용하지 않는 단순 합산 평가를 통해 낙찰 가능 업체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대리인과 시공·품질·안전

에 배치한 기술자는 동일 공종 안에서 교체하고 시공평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공평가점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심사낙찰제 시범 사업은 낙찰 가능업체가 일부에 불과하고 독과점·담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올림픽 SOC로 1,500억 보상금 풀린다

【평창】2018평창동계올림픽 주경기장인 평창군에 도로 개설 등이 잇따르면서 수백억원대의 보상금이 풀리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빠른 경기장 접근을 위해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고속도로·철도 등을 연결하는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이 보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추진에 평창 경기 활성화 기대

상업무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진입도로는 월정삼거리~횡계IC 간 지방도 456호선 7.2km, 씨리제~용산 간 군도 13호선 4.2km, 진부역 연결도로 8.8km 등 8개 사업 33.9km의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발주 예정이다.

이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이

지방도 408호선아 286필지 211억원, 지방도 456호선 505필지 87억원 등 66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극도와 원주~강릉 철도공사의 보상금까지 포함하면 1,5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보상업무 절차의 진행에 따라 “어느 지역의 누가 수억원을 보상받아 한뫼

잡았다더라”는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이 풀리며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처리 중”이라며 “보상 미협의 토지와 치장물의 경우 토지 수용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최성두 도건축사회장 취임** · 도건축사회는 6일 춘천시 옥천동 협회 사무실에서 임원, 회원사, 역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오 전 회장(사진 앞 오른쪽)의 이임식과 최성두 신임 회장(사진 앞 왼쪽) 취임식을 가졌다.



제28·29대 강원도건축사협회 이취임식이 6일 오전 도건축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최성두(사진 왼쪽) 회장이 이임하는 김종호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안은복

# ‘무등록업자에 재하도급’ 등 불법관행 여전

**#** S전문건설사는 올해 초 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돼 경기 군포시장에서부터 내년 7월 중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북구에서도 A전문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했다가 14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소재의 B전문건설사와 대전시에 있는 H전문건설사는 각각 건설기계 대금 지급의무 위반과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내년 5월 중순까지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받았고, 경기도 부천의 S건설사는 하도급 변경계약일을 발주청에 법정 기한보다 77일이 지나도록 통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됐다.

## 전문업체, 올해 하도급 관련 건산법 위반 95건 적발 페이퍼컴퍼니 양산·안전사고 초래... 개선대책 절실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위반 사항 상당수가 페이퍼컴퍼니 양산과 안전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사례부터 영세한 자재·장비업체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대금지급 불공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말까지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총 95곳(공고건수 기준)으로 집계

됐다. 구체적으로 등록 말소가 0건, 영업정지는 25건, 과징금 10건(철회 1건), 과태료 6건, 시정명령 54건 등이다.

이 같은 통계는 2013년, 2014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같은 기간 ‘건산법’ 위반 건수는 총 138건으로 집계됐으며, 2013년은 이보다 많은 197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14년 1~4월 등록 말소는 0건, 영업정지 44건(철회 2건), 과징금 26건, 과태료 6건, 시정명령 60건 등이다.

2013년에도 등록말소는 0건이었고, 영업정지는 27건, 과징금 35건(철회 2건), 과태료 43건(철회 1건), 시정명령 92건(철회 2건)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위반 건수가 줄어든 반면 영업정지와 같은 위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민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수가 줄어든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등이 여전하다는 것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영업정지 이후에 아내나 친척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기업을 다시 설립해 영업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업계 내 자정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